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이 대통령 “檢 보완수사 허용 안되 예외 필요 경우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본인의 해명도 들어 봐야 한다”며 지명 철회 여부 등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입법의 방향성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예외 적용’에 대해 “송지가 왔는데 공소시효가 이를밖에 안 남았을 때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면 (경찰에)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면 어떡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경우 (보완수사권) 남용의 가능성을 없애고, 예외적인 경우 남용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서 그런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신년 기자회견... 검찰개혁·이혜훈·영수회담 등 쟁점 현안 답해
 “이혜훈 탕평 인사... 문제 있어 보이지만 저항이 정도일 줄 몰라”
 영수회담 질문에 “여야 대화 우선... 결단 필요하면 그때 만나야”
 “당국, 환율 한두달 뒤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
 “집값 안정 위한 세금 규제는 마지막 수단... 공급 방안 곧 발표”

하는 것이기도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은 최종안이 아니다”며 “입법은 국회의 하고, 논쟁이 벌어질 텐데, 그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빼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건가”라고 되물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한테 권력을 빼는 게 개혁이 목표가 아니다”라며 “최종 목표는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00명 넘는 검사가 있는데 이런 나쁜 것 한 검사도 10% 될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걸 다 고려해야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부정청약·보좌진 갑질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이혜훈 후보자를 두고서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혜훈 지명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쉬운 건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것마저 봉쇄됐다”며

“본인도 저도 참 아쉽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 국민들께서도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들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공정하다”고 했다.

지명 전 부실 검증 지적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맞다”면서도 “보좌관한테 갑질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나. 유능한 분이라 판단되고 그쪽(보수)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 받아 3번 당선되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이 탕평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은 몰랐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편 갈라서 싸우긴 했지만, 싸움은 끝났다. 모두를 대표하는 통합된 나라로 가야 한다”며 “이렇게 문제 될지 몰랐다. 앞으로 인사하는 데 참고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2면에 계속) /뉴스

‘통합 광주·전남’에 4년 20조, 5년 후엔?

“일시적 지원 그쳐선 안돼”, “지속성 담보할 법제화 중요”

이 대통령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터운 지원이 대원칙”

국회 간담회, 주민 공청회서 요구 봇물... “입법 보완 필요”

광주·전남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정부가 내년 5조원씩, 4년 간 20조원을 약속한 가운데 과격적인 재정 지원이 지역 균형발전의 변곡점이자 게임제안자가 되기 위해선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낙후의 대명사’인 광주·전남에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통합 특별법에 재정 분권에 버금가는 지속성과 항구성을 명문화한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지원한다’는 가중치 원칙을 거듭 밝히고 있다.

21일 열린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2차 간담회에서도 재정 지원의 지속성에 대한 담보와 법적 근거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등은 “특별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정으로, 정부가 약속한 20조원이 일시적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재정 지원 조항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4년간 20조원을 받는 것은 기대 이상의 통 큰 결정”이라며 “그러나 ‘재정이 풀려줬다’는 이유로 교부세가 줄어들지 않도록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최근 기자회견 담화를 통해 “재원 구조와 지원기간, 특히 실효성 등이 입법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며 “합리적 기간 재설정과 협상 상설화 논의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논의된 특별법안에는 통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보통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100분의 12)을 가산해 20년 간 추가 지원하고, 지방소

비세 안분 가중치를 상대적으로 지방 정부에 유리한 ‘전남도’ 기준(100분의 300)을 적용하는 조항이 핵심 내용으로 담겨 있다.

부가가치세 등 국제 일부 지원과 자치구 보통교부세 별도 산정, 균형발전기금 신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별시 계정 별도 설치 등도 포함됐다.

지난 19일부터 진행 중인 릴레이 주민 공청회에서도 재정 지원의 항구성과 지속성은 중요 화두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 인센티브로 신설되는 가중 ‘통합특별교부세’나 ‘통합경제지원금’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전체 국세의 80%를 차지하는 3대 국제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교부 액면 그대로 인센티브 성격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통합 지자체에 대한 과격적 지원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수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관계자는 “재정 분야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 최우선시되고 세부적으로 확정돼야 할 핵심 중 핵심”이라며 “지속성을 담보하고 명문화하기 위해 입법 과정에서 디테일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부

지면안내

- ▶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운명의 ‘입법 레이스’... 해법 관심 3면
- ▶ 광주·전남 교육통합시 1조3000억 지원... 학군제는 논란 9면

Goheung Spaceship Terminal



지구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

제16회 고흥 우주항공축제

2026.5.2. (토) - 5.5. (화)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일원

주최/주관 고흥군 고흥군축제위원회